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¹⁾

김 형 주 선임연구위원

장 근 영 선임연구위원

요약

-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속연구과제의 2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교육훈련 및 주거 빈곤을 중심으로 한 빈곤 인식과 정책 욕구를 토대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청년은 이행기 주요 과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 노동, 주거와 더불어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는 청년의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21년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경제: 근로소득, 자산 빈곤, 노동: 실업, 비정규직, 정신건강)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2021년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산 빈곤, 비정규직 비율, 정신건강 결핍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은 전통적인 빈곤 기준인 소득 외에도 자산, 교육, 노동, 주거, 건강 등 다차원 영역에서 다양한 기회와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음. 특히, 청년층의 가구소득 빈곤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둘째, 청년 가구의 높은 자산빈곤율과 열악한 주거는 최근 청년층의 집단내 불평등 수준이 더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음. 셋째, 코로나19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을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특히 순자산 빈곤, 정신건강, 의료비 부담,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위험이 매우 증가하였음. 청년의 경우 건강한 집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코로나19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영역의 근로소득 빈곤과 노동영역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의 상대적 빈곤 위험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연령층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노동시장 진입 초기 청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임금 근로가 아닌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과제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김형주, 장근영, 박미선, 정세정, 변금선, 배정희, 김지민, 2022)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일반적으로 빈곤층을 규정할 때 전통적으로 소득과 노동을 중심으로 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연령층으로는 아동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였음. 우리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았으나, 200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청년 고용의 문제로 인해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서 장기적인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 최근의 청년층의 삶은 빈곤에 직면하거나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장기간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장기간의 고용 침체로 인한 삶의 여러 부문에서의 문제가 다발적으로 촉발되어 회복탄력성이 상실된 면으로 설명할 수 있음. 즉, 청년의 빈곤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미래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필요함.
- ▶ 본 연구는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 실태를 다년 연속연구를 통해 이행경로 및 영향요인을 누적하여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임.
- ▶ 금년도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교육훈련 및 주거 빈곤을 중심으로 한 빈곤 인식, 정책 욕구를 토대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1차년도 (2021년)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조사, 청년 빈곤층에 대한 규모 추정, 정책욕구 파악 등을 통한 자립안전망 토대 구축
	내용	• 소득(경제), 교육, 노동, 주거, 건강, 안정성 등 분류를 및 지표 개발,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집단 유형 분석 및 도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공인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소득, 노동)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 정책욕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소득, 노동),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		
2차년도 (2022년)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조사,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생애주기 빈곤이행 경로 및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교육훈련, 주거)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의 정책욕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교육훈련, 주거),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		
3차년도 (2023년)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파악하고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적인 청년 자립안전망 구축 방안 도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취약계층 청년의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건강, 안정성)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욕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국가적 · 지역적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건강, 안정성),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출처: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p.7.

[그림 1]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청년 빈곤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관련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고찰로서, 우선 청년 빈곤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정책적 개념화 동향 분석과 청년 빈곤에 대한 최근의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들을 분석하였음.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청년 빈곤과 관련되어 추진한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 국회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청년 빈곤 관련 입법 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을 선정하여 청년 빈곤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분석 등을 하였음.
- 우리나라 청년의 빈곤 현황에 관한 다차원적인 실태를 분석하였음. 2022년 한국 청년의 빈곤 실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 고용,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빈곤 지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통계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공식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또한 실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빈곤 유형에 따른 생애주기적 빈곤이행의 원인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청년 빈곤 문제 주요영역에 대한 실태, 인식, 정책에 관한 욕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1차년도에 도출한 청년 빈곤 분류틀을 기초로 하여 2차년도 중점영역인 교육훈련, 주거 영역에 대한 실태, 인식, 정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 청년 빈곤의 주요영역에 대한 청년층 심층적인 인식과 인과관계의 경로를 조사하였음. 청년의 삶에서 교육훈련, 주거 영역에 있어서 빈곤 상황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실태 파악을 위해 청년들의 일과 삶 전반에서 빈곤의 상태, 원인 및 경로, 그리고 위험성 예측을 위한 빈곤 청년 대상의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하였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로서, 정책 비전 및 방향,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 문헌고찰로서 청년 빈곤에 관한 개념, 청년 빈곤 관련 선행연구 검토, 청년 빈곤과 관련하여 추진된 정책 및 법제도 현황 고찰, 해외의 청년 빈곤과 관련된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음.
- 전문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추진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각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청년 빈곤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 분석과 청년 빈곤지표에 대한 실태 분석 등을 공동연구 하였음.
- 2차 데이터 분석으로서 1차년도에 수집한 청년 빈곤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 청년의 경제, 노동, 교육훈련, 주거, 건강, 사회·문화자본 등에 대한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음. 또한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주거를 중심으로 다차원 빈곤 집단 심층분석을 하였음.
- 설문조사로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법정 연령인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의 교육훈련 및 주거영역에 대한 현황, 인식, 정책 인지도와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표본 수 4,032명을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으로 추출하여 온라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심층면담조사로서 청년 빈곤의 심도깊은 분석을 목적으로 청년들의 교육훈련과 주거와 관련된 삶을 중심으로 빈곤의 인식과 상태, 위험요인, 정책 욕구 등에 대해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 실시하였음.
- 청년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 및 포럼을 통해 청년 빈곤 현황, 원인,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적 대안에 대한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였음.
- 정부부처 정책담당자, 정책사업 수행기관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연구의 주요방향, 현행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정책 방안 등 정책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음.

3. 연구결과

▶ 1차년도에 이어 통계청 승인통계 등을 활용하여 2차년도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확인하였는데, 다른 연령집단과의 비교, 시계열 변화 추이,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통해 이행기 청년의 빈곤 위험과 양상 변화를 분석하였음.

- 청년은 이행기 주요 과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 노동, 주거와 더불어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는 청년의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21년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경제: 근로소득, 자산 빈곤, 노동: 실업, 비정규직, 정신건강)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2021년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산 빈곤, 비정규직 비율, 정신건강 결핍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청년은 전통적인 빈곤 기준인 소득 외에도 자산, 교육, 노동, 주거, 건강 등 다차원 영역에서 다양한 기회와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음. 특히, 청년층의 가구소득 빈곤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둘째, 청년 가구주의 높은 자산빈곤율과 열악한 주거는 최근 청년층의 집단내 불평등 수준이 더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음. 셋째, 코로나19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을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른 연령층과 비교할 때, 특히 순자산 빈곤, 정신건강, 의료비 부담,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위험이 매우 증가하였음. 청년의 경우 건강한 집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코로나19는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영역의 근로소득 빈곤과 노동영역의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의 상대적 빈곤 위험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연령층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노동시장 진입 초기 청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임금 근로가 아닌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청년 빈곤 관련 인식, 전망,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결과

- 우리나라의 만 19세~34세(법정 연령)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에 대한 3개년 연구 중 2차년도 중점영역인 교육훈련 및 주거에 대한 실태, 인식, 정책욕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표본 수 청년층 4,032명에 대해서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 추출로 온라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성별, 청년연령대 내의 구분, 주관적 계층, 2인가구 중위소득 등을 중심으로 표본 수에 있어서 가급적 균형을 맞추었음.
- 1차년도에 개발한 청년 빈곤 분류틀 및 지표에 따라 교육훈련과 주거 영역에 대한 청년들의 실태, 인식, 정책욕구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청년의 교육훈련 관련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학 진학보다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진학하지 않았다는(56.6%) 의견이 두드러진 반면,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한 이유로는 취업을 하려면 대학 진학이 유리(59.1%)하고, 대학 진학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51.5%)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견이 과반수로 나타남. 학교교육 이외에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매우 적은(23.3%)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45.1%)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이해됨. 한편,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직업훈련 교육 전반적 만족도는(77.0%) 매우 높게 나타났음.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이 부족해(39.6%)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86.8%)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정책으로 대학 등록금을 인하(55.1%)하거나, 국가 장학금을 확대(42.9%) 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학교에서 진로 및 취업준비(42.8%)를 할 수 있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의 주거 관련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 응답자가 아파트에(55.7%)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48.5%로 파악되었음. 현재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향(63.3%)이 높게 나타났고, 청년 스스로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보다 전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53.9%)을 통해 주거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우리 사회에서 주거란 ‘안정적인 삶의 기반’(64.6%)이며, 청년 과반수가 청년 시기에 자가 취득이 필요(64.4%)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청년들의 영끌(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통한 자가 취득 현상에 대해 무리한 자산 형성으로 가계의 위험 요소(25.8%)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향후 주택 마련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의 영향(37.1%)과 자산 확보를 위해 실리적(23.0%)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무리를 해서라도 자가를 취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음. 부모의 자금 지원(76.9%)이 있어야만 자가 마련이 가능하며, 청년 대다수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자가 마련이 불가능(76.3%)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으로 전월세 비용이 경감(42.8%)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년 주택(34.3%) 또는 청년 임대주택(48.5%)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

▶ 청년 빈곤의식 심층면담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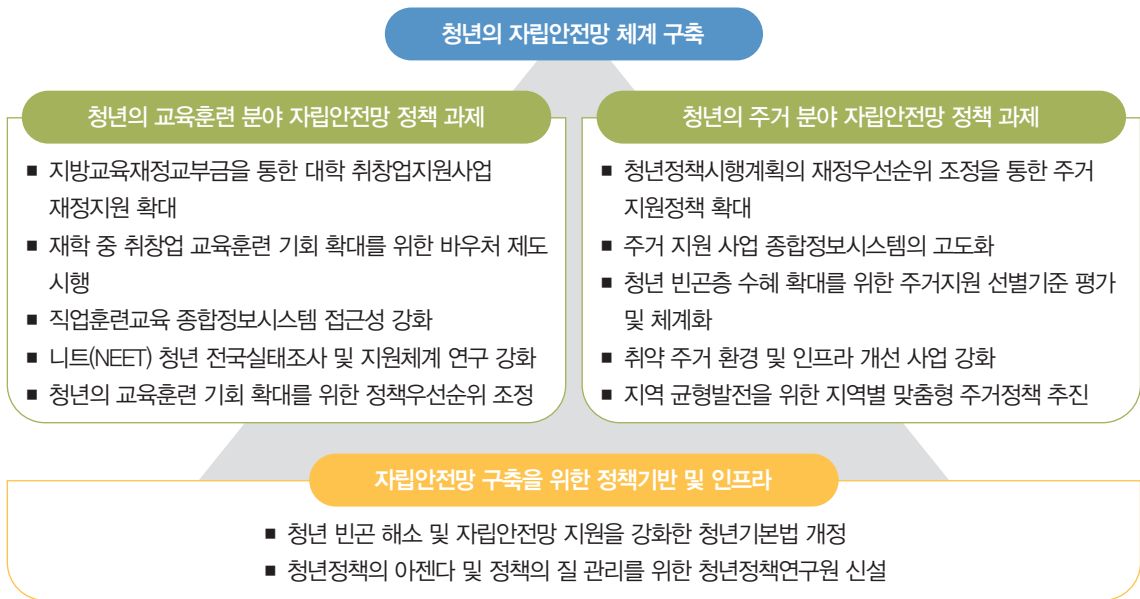
- 2차년도 청년 빈곤의 중점영역인 교육훈련 및 주거에 대해 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일상에서 교육훈련 및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빈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빈곤의 실태, 원인, 전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 교육빈곤과 기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청년들은 대학 교육, 사교육 및 이외 교육 훈련 비참여가 경제적 빈곤에 의한 교육빈곤이라기 보다 본인의 선택에 의한 비참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교육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경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소수 있었고, 특히 고용 분야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체감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음.
- 니트 및 교육빈곤층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육, 훈련, 진학 및 취업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니트(NEET)족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과다한 경쟁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현 청년세대들이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취업 실패 등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지와 재기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음. 교육빈곤층 발생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의 격차 등 ‘부모’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교육훈련 관련 정책욕구와 관련하여, 교육 및 훈련 지원 정책의 개선 사항으로 실무자의 현장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 동일 훈련 분야 참여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등 공유의 장을 만들어 줄 것, 일자리 연계를 보다 강화해 줄 것, 청년 진로 방향 등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수혜 요건을 완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 등이 있었음.
- 심층면담 참여 청년들은 현재 주거 관련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세 및 자가 마련을 위한 대출 의존도도 매우 높았음. 특히, 독립과 혼인이 보다 당면한 문제인 30대 청년들은 주택마련과 주거비용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20대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주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집값과 이를 따라갈 수 없는 청년의 소득 수준 및 주택 공급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거빈곤이란 ‘자가가 없어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 주택 소유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으로 주거비용을 감당이 어려운 상태’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 등으로 분석됨.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주거빈곤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청년 주거 지원 사업 개선 의견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 보완 요구가 가장 많았음. 월세 지원, 임대차보호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당장의 주거빈곤과 어려움을 경감하는 지원 외에도 청년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TV, DSR 확대 등의 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4. 정책제언

▶ 정책 비전 및 분야

- 본 연구에서는 금년 2차년도 연구에서 중점 주제로 다룬 교육훈련 분야와 주거 분야, 그리고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 등 3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교육훈련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대학 취창업지원사업 재정지원 확대
 - 정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대학 내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많은 재학생들이 관련 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학 중 취창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 시행
 -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의 경우 대학의 교육과정 내에서 졸업 이후의 진로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경로를 밟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하지만 실제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을 위해 별도의 시간과 경비를 들이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과정 자체가 사회진출에 유용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겪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직업훈련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접근성 강화

- 청년 시기의 취업 준비와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고등학교든 대학교이든 간에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제공되는 직업세계, 직업훈련교육 등의 내용이 충분하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비사회인들에게 직업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필요함.

- 니트(NEET) 청년 전국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연구 강화

-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에서 다룬 바와 같이 2020년 우리나라 청년의 니트 비율은 20.6%로 OECD 평균인 13.4%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지난 4주간 그냥 쉬었다는 응답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도 안하고 교육훈련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 청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청년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조정

- 청년정책의 정책고객으로서 청년들의 정책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함. 특히 정책자산의 한계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해당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는 마땅히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아야하고 이는 해마다 정책고객의 의견조사를 통해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주거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 청년정책시행계획의 재정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주거 지원정책 확대

- 현재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청년들이 관련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함.

- 주거 지원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 청년대상 주거지원 정책은 매우 다양함. 본 연구에서 다룬 사업들만 나열해도 청년 임대주택 공급사업, 청년 주택공급 확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 사업임.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의 개별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상황임. 따라서 청년 대상 주거지원 사업이 세분화될수록 이들 개별 사업의 정보를 통합하여 해당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청년 빈곤층 수혜 확대를 위한 주거지원 선별기준 평가 및 체계화

- 현재 시행되는 청년 대상 주거지원 정책 대부분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선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형식임. 이러한 선별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이 목표로 하는 수요자에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별로 선별 기준을 강화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됨.

- 취약 주거 환경 및 인프라 개선 사업 강화

- 현재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사업은 주로 주거 비용 부담 경감과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낙후 지역의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인 주거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

-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전달이 필요함. 수도권은 주거비용 부담에, 비수도권은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 인프라의 확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자립안전망 체계를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 기반 구축

- 청년 빈곤 해소 및 자립안전망 지원을 강화한 청년기본법 개정
 - 2020년 초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는 국가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청년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역할로 명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하지만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소외되거나 빈곤한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청년정책의 아젠다 및 정책의 질 관리를 위한 청년정책연구원 신설
 - 새정부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는 윤석열정부 국정철학,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17번째 국민과의 약속인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는 청년들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중 우리사회의 청년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거기반 정책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설치 검토를 제시하고 있음. 이는 현실에 부합하고 양질의 정책을 수립하고 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함.

참고문헌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이민정(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1.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